

“왜 주행사장을 여기에”...김민석 여수섬박람회 준비 질타

돌산 주 행사장 배경 설명 ‘납득 부족’ 공개 지적 행사 성격·콘텐츠 모호...“무엇 보여줄지 명확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행사 콘셉트와 주행사장 선정 배경, 교통 대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23일 전남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열린 준비 상황 점검 회의에서 “설명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행사 콘셉트와 주행사장 선정 이유, 교통 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행사장을 기존 엑스포장이 아닌 돌산 일대로 정한 배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총리는 “(엑스포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은 와닿지 않는다”며 “이 설명을 듣고 오히려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왜 주 행사장을 다른 곳에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니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또 “섬 박람회라면 무엇을 보여주는 행사인지 콘셉트가 더 분명해야 한다”며 “섬을 보는 것인지, 체험하는 것인지, 전시 중심인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행사 방향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통 문제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김 총리는 “현재도 교통이 수요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박람회 기간에는 관광객 증가로 주민 불편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요트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되,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람회 이후 효과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그는 “행사가 끝난 뒤 여수 섬 방문객이 실제로 늘어나야 한다”며 “접근성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등 관광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 운영 구조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중앙정부 지원은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여수시가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전남도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인공섬 조성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김 총리는 “국민적 오해와 비판에 대해 5분5답, 10문10답 형태로라도 명확하게 정리해 신속히 설명해야 한다”며 “재정동원 목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진도지구 주행사장 현장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방문. 주요시설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청

표와 콘텐츠, 콘셉트에 집중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지역 사정을 반영해 설명을 명확히 정리하고 조속히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박람회 기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박람회 기간 ‘반값 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싶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김 총리는 “관광 가치를 높이는 방안은 의미가 있다.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광주 통

합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 개막까지 약 5개월을 남겨둔 상태다. 최근 행사장 준비 상황과 환경 정비 문제를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현장 관리와 일정 추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고, ‘제2의 잼버리’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인프라 조성과 홍보에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조성위, 융합문화과학권 발전 방안 모색

GCC·CGI센터 등 광주 콘텐츠 산업 생태계 현장점검

광주시에 실감콘텐츠 산업 거점으로 조성 중인 ‘융합문화과학권’의 경쟁력 점검과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함께 23일 남구 송암동 CGI센터에서 ‘융합문화과학권’ 현장 실사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문화전당교류권 점검에 이은 두 번째 순회 현장 점검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원중 조성위원

장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문제부 추진단, 광주시 콘텐츠산업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실사단은 융합문화과학권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CGI센터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를 차례로 둘러보며 인프라와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광주시는 업무보고를 통해 CGI센터와 GCC를 중심으로 인제 1470명 양성, 콘텐츠 기업 19개사 유치 등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K-

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총사업비 25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기존 영상 후반작업

기지인 CGI센터와 실감콘텐츠 제작 거점 GCC를 연계해 창작·기술·비즈니스가 융합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조성위와 문제부에 “올해 진행 중인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전 타당성 용역 수행을 위한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원중 조성위원장은 “융합문화과학권의 첨단 인프라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

산이다”며 “조성위 차원의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주요 성과 보고를 통해 드라마 ‘아이쇼콜라’ 등 화제작 제작을 뒷받침한 GCC의 실감콘텐츠 인프라, 지역 정주율 54%를 기록 중인 ‘GCC사관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진흥원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 실사에서는 CGI센터 종합촬영 스튜디오와 GCC의 가상촬영 시스템 ‘VX스튜디오’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제작 인프라도 점검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박근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린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독립몰수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의원(광주 광산 갑·사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의 사망, 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인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법적 공백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행질서 파괴 범죄로 축적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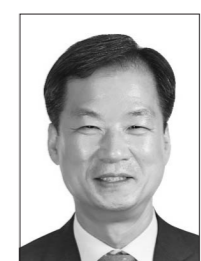
또 포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등 조직범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수익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세탁이 빠르게 이뤄지며 범죄가 확대 및 재생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근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과 민생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는 물론 민생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법사위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1면 ‘민주당 경선’서 계속

통합특별시장 경선을 시작으로 약 두 달간의 일정이 사실상 중단 없이 이어지며 심리적 피로와 함께 정치적 거리감까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경선 일정도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는 경선 일정조차 시작되지 않았고, 기초의원 및 청년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 경선이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당원 참여 의지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가 바뀐 상황에서 이를 반영한 일괄 경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단계별로 나뉘면서 혼선이 커졌다”며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는 아직 경선 일정조차 불투명해 유권자 혼란과 함께 ‘깜깜이 선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광역의원 19곳 경선 결과 발표

19명 본선행...권리당원 100% ARS 투표로 선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3일 6·3 지방선거 광주 광역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 첫날인 21일에는 당원에게 전화를 거는 ‘아웃

바운드’ 방식(총 5회)이, 둘째 날인 22일에는 전날 미참여 당원이 직접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인바운드’ 방식이 적용됐다.

이 결과 △동구1 홍기원 △동구2 노진성 △서구1 강수훈 △서구2 오미섭 △서

구4 심철영 △남구1 강원호 △남구2 노소영 △남구3 박상길 △북구1 안병환 △북구2 김건안 △북구3 이숙희 △북구4 조석호 △북구5 주순일 △북구6 허석진 △광산구1 한귀례 △광산구2 이영순 △광산구3 이영훈 △광산구4 이귀순 △광산구5 김광만 후보가 공천장을 받게 됐다.

광주시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시당 상무위원회의 의결과 중앙당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최종 후보자(공천자)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

도, 축산농가 조사료 수급안정에 1029억 지원

중동 정세 등 곡물가 인상 우려...적기 수확·품질 향상 총력

전남도는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과 배합사료 가격 인상 우려 속에 다행하듯 올해 조사료 생산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기 수확과 품질 향상을 위해 1029억원을 지원한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등 동계 조사료가 월동기 온화한 기온과 적정 강우 등 양호한 기상 조건으로 5월부터 수확하는 조사료 생산량은 전년보다 20% 이상 크게 증가한 약 75만9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기후여건과 생육상황에 따라 최종 생산량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도내 5만6000ha에서 생산된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 조·운송비로 ha당 114만~221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품질 등급을 거쳐 유통되는 조사료는 ha당 최대 259만원을 차등 지원해 품질 고급화를 유도한다.

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은 조사료 재배·수확·운송에 필수적인 트랙터, 결속기, 램피복기 등 장비를 지원하며 조사료 재배 일반단지에는 수확 면적 20ha당 1억5000만원, 전문단지 70ha당 3억원으로 총 99억원을 조사료경영체에 지원한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조사료 가공시설 공모사업에 영광축산업협동조합이 선정돼 3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불안정과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조사료 생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사료 종자구입비 보조 비율을 당초 30%에서 50%까지 상향 지원한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올해는 기상 호조와 농가의 노력,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확대 등으로 조사료 생산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축산농가의 조사료 수급 불안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사료 수급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생산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